

대구광역시

홍준표, 달빛철도법 통과 “30년 숙원 풀었다”

관련기사 2·4·5면

TK신공항연계 달빛철도 500만호남 여객과 물류 수송 기회 제공...거대한 남부경제건설 혈맥철도

영호남 1800 원사업이 해결 영호남 화합 철도 건설을 위 지난 25일 오후 30년 숙원사업 설이 마침내 성



만 시·도민 숙됐다. 을 담은 ‘달빛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인 달빛철도건설 사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률로 견인한 입법 패거”라며 반색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이어 대구균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달빛철도 건설을 법률로 견인하는 입법 패거”라고 말했다.

그는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던 달빛철도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성사되게 됐다”고 반겼다.

홍 시장은 “최초의 비수도권 도시간 동서간선철도인 달빛철도는 금전적 환산이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영호남 동서장벽에 혈맥을 뚫는 철도”라고 했다.

그는 “영호남은 달빛철도를 타고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발견하며 상생 발전하는 남부경제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나아가 TK신공항과 연계될 달빛철도는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의 수송 기회를 제공해 거대 남부경제권을 만든다. 달빛철도의 가치와 의미에 뜻을 같이하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신 강기정 광주시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여은 기자



경북도의회, 저출생 극복 적극 지원 결의 경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경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2024년 첫 번째 회의의 시작과 함께 열린 행사에는 경북도의회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참석,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교육청, 도서관 증장기 발전 2400억 투입

도서관 물리적 환경 개선 양질의 자료 확충 청소년 문화 놀이터 건설... 박차

경북교육청이 도서관증장기 발전에 2400억원 쏟아붓는다.

경북교육청은 “2024-2028 경북교육청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을 계기로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양질의 자료를 확충해 청소년들의 문화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도민 누구나가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문화복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요 중점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장서 확충 △공공도서관서고 설치 △청소년 메이커 공간 구축 △해의 도서기증 등이다.

종합계획에 따라 ‘지식정보의 확장과 미래 공동체 역량 강화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4대 전략, 10개 정책 27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5년간 1800억 원을 투입 △2024 영덕·영양도

서관 △2025 예천도서관 △2026 포항·영천·칠곡도서관 △2027 구미도서관 △2028 김천·경주도서관 등 총 9개 도서관을 신설·이전 건립 또는 새단장한다.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위한 도서관자책·전자저널 등에 매년 55억여 원, 총 277억 원을 들여 장서를 확충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ICT 시스템 구축 △미래 기술 체험 공간 △미디어 창작실 △메이커 스페이스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한다.

최준길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도·독도는 오명관광역영사 관할 지역입니다. 여행안내 054-791-1717



최기문 영천시장은 29일 오전 시장실에서 (주)경천산업 조정임 대표로부터 고향사랑기금을 기탁 받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29일 오후 시장실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한다.

오늘의 지면

- 경북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2면
- 청송군 든든한 보편 복지 실현 3면
- 경주, 녹색성장 탄소중립 실천 6면
- 알바도 종대재해법상 근로자 7면
- 영덕 설맞이 행사 분주 8면
- 이병환, 더 큰 성주 도약 9면
- 신현국, 문경 행복도시 건설 10면

파울 두클로스 주한 페루대사 주낙영 예방한 자리서 밝혀

“2025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 경주에서 열려 페루 대통령이 경주를 찾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중남미 국가와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주를 찾은 파울 두클로스(Paul Duclos) 주한 페루대사가 주낙영 경주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과 수교 61주년을 맞는 페루는 올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의장국이다.

파울 두클로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개최되는 제31차 APEC 개최도시 중 한 곳인 아레키페는 2015년 경주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도시로 경주와 인연이 매우 깊다.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페루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경주시와 공유하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24일 시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파울 두클로스(사진 우측) 주한 페루대사를 접견하고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실제 페루는 1998년 APE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부터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APEC 정상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다.

올해 개최되는 제31차 APEC 회의는 페루 5개 도시(스트루히요 △아레키페 △우루밤바 △푸갈라 △리

마)에서 각종 회의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정상회의는 수도인 리마에서 11월 열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가 최적지임에 이견 없다”는 점을 부각, 주한 페루대사에게 경주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주시장은 “페루가 APEC 의장국인 해에 이뤄진 대사의 경주 방문은 경주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노력에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원자력, 전자자동차 산업 등 미래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인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파울 두클로스 주한 페루대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경주에서 보여주시는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이 만남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향한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용찬 기자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의성군

경주 비료공장 화재 12시간여 만에 진화...

27일 새벽 2시59분경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의 한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관 57명과 장비 19대를 동원, 12시간여 만인 오후 3시36분

쯤 불길을 잡았다. 공장 내 창고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창고 3개동(803㎡)이 모두 불에 탔고, 1개동(330㎡)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억1000

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북소방안전본부 측은 “금수성 물질(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발열 반응이나 폭발 등을 일으키는 물질)에 불길이 붙어 방수가 불가능해 불길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



경북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본격 의정활동 돌입



교육위원회, 조례안 3건 심사 올해 현안과제 면밀히 살펴

경북도의회의가 지난 25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도의회는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회를 열고, '2024 경북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윤승오 교육위원장은 “경북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경북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김홍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은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낙후된 시설을 개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황두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

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교육청, 1수업 2교사제 중학교까지 확대

기초학력 책임 있게 보장되도록 적극지원

경북교육청이 올해 1수업 2교사제를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경북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다각적 진단체계 구축 △충족한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반 구축 △모두의 교육결손 해소 등 4개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교육청은 먼저, 다각적인 진단을 시행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고, 겨울방학(학년말) 기간 중 학습 공백 극복에 나선다. 심리·정서 역량 검사를 체계화해 학습부진의 원인이 되는 정서적 문제 해소에 나선다.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사다리 교실’을 학년당 1개 학급 이상 편

성하고, ‘기초학력 오름 학교’와 1수업 2교사제 등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 분석과 지원방안 정책 연구, 운영 길라잡이 제작·안내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한다.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학습관리 △학습 튜터링 △학습 도약 계절학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최준길 기자

달빛철도... ‘긱간지기’ 기재부 난감

기재부 “예타 면제 조항 삭제 국회 여러차례 전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가이라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놓였다. 입법부에서 의결한 사안을 뒤집을 수도 없는 데다 제2·제3의 포퓰리즘성 예타 면제 사업 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질 수 있던 우려도 상존하면서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6명 중 211명이 찬성, 1명이 반대, 기권은 4명이었다.

달빛철도 사업은 2021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에 그쳤다. B/C값이 1.0보다 낮으면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다.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한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B/C는 0.51~0.58이었으며, 그나마 대구경북 신공항은 1.032로 기준치를 겨우 넘겼다. 실제 달빛철도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담긴 신규 노선 44개 중 하나다. 다른 철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요구가 쏟아질 수 있는 배경이다. 다만 사업 착수까지 아직 절차가 많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법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예컨대 단선인지 복선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사업비가 2~3배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며 “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도 달라서 현재 통과된 특별법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미경 기자

경북소방본부, “테러 꼼짝마”

119특수대응단 역량 키워

경북도 소방본부는 경북도 119특수대응단을 방문해 특수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북도 119특수대응단은 헬기 1대, 구조견 3두, 기동장비 25대 등 191종 3782점의 구조장비를 보유한 원자력, 화생방,

테러 등 특수재난을 대응하는 전담 조직이다. 119특수대응단은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등 특수사고 초기 대응을 위해 2013년 설치됐다. 2022년 포항시 기계면에 청사를 준공하여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경북 북부지방 집중호우, 2022년 태풍 힌남노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조해 소방청 주관 2023년 통합대응 최우수 119특수대응단 선정, 제36회 전국소방기동경연대회 신속동료구조팀 분야 1위 달성 등 전국 최강 특수대응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경북도 119특수대응단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특수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인구 ‘양극화’ ... 대도시 늘고, 비수도권 줄고

65세 이상 농가인구 증가... 2032년 56.2%까지 늘어...

총인구 감소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고령화 심화 현상이 중첩되면서 비수도권 인근 농촌 지역에 대한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농촌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 군(郡) 지역에선 인구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2024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 고령화율은 26.1%에 이르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24년 49.9%, 2028년 51.7%, 2032년 56.2%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인구 증가는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2022년 5169만명으로 약 0.26% 감소했고 2030년엔 513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농촌 인구는 2010년 876만명에서 2020년 976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961만명(총인구의 18.6%)까지 소폭 감소했다. 2050년 무렵에는 약 845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인구는 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등의 입지 여파로 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이 구분되는 공간적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도시 인구의 읍(邑) 지역 인구는 2020년 511만명에서 2022년 510만명으로 1만명(0.3%) 감소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1172개 면(面) 지역 인구는 14만명(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가 2000명도 되지 않는 면도 2000년 168곳에서 2020년엔 353곳(30.1%)으로 급증했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2년 25.0%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2.4%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위 연령이 56.3세에 달해

면 지역의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의 경우 농촌 마을의 안전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농촌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기준 농촌 지역에 약 6만6000호의 빈집이 존재했고 2017년 4만5000호 대비 약 2만 호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인구 감소는 주민 공동체 여건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농촌 마을에는 노인회, 부녀회, 마을회 등 마을 조직이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귀농·귀촌인 증가 등 주민 구성의 변화와 농촌의 고령화 심화로 인해 마을 공동체 여건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102개 농산어촌 패밀 마을의 이장 설문 조사 결과 일반농촌 마을과 원격농촌 마을의 고령화율은 각각 61.4%와 7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 의사결정과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 갈 주체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 현상이 아니라 농촌의 주거·일·쉼 공간으로서의 기능 쇠퇴와 문화·경관·공동체의 훼손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황대용 기자

대구시 ‘근로자 권리보호·복리증진’ 기본 청사진

노사문화 선도 29개과제 5년간 9198억 투입 추진

대구시는 노동권의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와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건강한 노동 환경과 안정된 노사 문화를 정착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미래 50년 변역을 위해 노사가 함께 상상하는 노사문화 선도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마련된 기본계획은 ‘대구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5개년 중기계획으로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아 연차별로 추진된다. 앞서 대구경북고용복지지원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대구지역 노동실태 조사 실시, 노동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 지역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미래 50년을 함께 열어갈 노사문화 선도도시 대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 29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5년간

총예산 9198억원(국비 3955억원, 시비 5243억원)이 투입된다. 4대 정책목표로 △노동권의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사각지대 취약노동자의 보호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 △노사상생 위한 노동거버넌스 강화를 선정했다.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대상 찾아가는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노무사제도를 도입한다. 표준노동지침서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노조설립 지원으로 취약계층 노동기본권을 보호한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단계적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청소년과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중장년·고령자 일자리 안정망 강화와 장애인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감정노동자·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고용환경개선 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시 소속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 산업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고용 실태조사, 노사정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방안을 찾는다. 지역산업맞춤형 고용창출지원사업,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 등 국제연계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산업인력관리지리를 늘린다. 조여은 기자



깨끗한 청도시장에서 설 명절 장 보세요~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26일 기간 중 전통시장 4개소(청도·풍각·금천·이서시장)의 시장상인회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설맞이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설 세수용품 구입을 위해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시장 구석구석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집중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동우청도시장은상인회장은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고구 명절인 설을 앞두고 깨끗한 청도시장을 만들어 오시는 손님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맞이 대청소를 위해 애써주신 시장상인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 세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전통시장 활성화' 설 명절 장보기 행사 추진

영덕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 등 소비자의 구매 형태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이에 해당 기간 군청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등 1050여 명이 참여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덕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장보기를 하게 된다.

조여은 기자

영천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영천시는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1주간 관내 준·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명절기간 판매량이 많은 단위제품(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및 선물세트 중심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과대포장 단속의 경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최은하 기자

청송 복지시책 '꼭맞게 든든한 보편 복지 실현' 추진

군민중심 사회 안전망 구축 모두 행복한 맞춤형 복지구현

청송군은 복지시책 추진방향을 “꼭맞게 든든한 보편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사회보장수급가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결정을 위해 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방문실제 확인 등으로 적정한 급여를 결정하고, 인적·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정비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맞춤형보장급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안전망(안녕살피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구축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조직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현할 수 있도록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 IoT 장비를 통해 스마트 안부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연금·수당·의료비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 활성화 물품을 지원하고 특히 소파·임시스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경로당



군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청송군인재양성원

좌식문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매년 노인일자리아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나간다.

또한 기초연금지급, 어르신 목욕비 지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운영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보육환경 조성하고 출산 분위기 장려에도 앞장선다.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된 보육



군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중장년 요리교실 운영

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드림스타트사업·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등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 방문교육 및 우리말 공부방, 사회적응 특화프로그램 등도 운영·지원한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고등

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안도 마련했다.

끝으로 학업 향상과 재능연마에 전념하도록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와 임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송인재양성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며,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청송 아카데미, 행복청송 군민대학,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복지청송, 그리고 군민의 삶이 보다 안정된 윤택한 행복 청송을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울릉군 지방소멸대응 TF 회의 개최

울릉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울릉군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TF를 구성하고 24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지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투자계획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분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최대 금액을 배분받기 위해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투자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세부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울릉군은 지방소멸대응 TF 회의를 통해 정주여건·복지·교육·관광·일자리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울릉 맞춤형 인구 활력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윤환 기자

영양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농업인에 안정된 생산과 판로 제공 지역 선순환 체계 전략 수립에 박차

영양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생산, 유통, 소비, 복지, 환경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는 안정된 생산과 판로를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군수, 군의회 의원, 관련부서 공무원, 영양교육지원청, 지역농협, 관련 기관단체,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상황, 푸드플랜 비전 및 목표, 앞으로 먹거리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고회에서 개진된 내용들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영양군 푸드플랜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영양군 푸드플랜 비전·목표·전략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으로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윤동 기자

동구미역 가시화...대구경북 신공항철도 다음달 예타 신청

총 사업비 2조 444억 원, 66.8km 복선전철 구미 신공항 배후 중심도시로의 역할 기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차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구미가 노선에 공식적으로 포함돼 동구미역 신설이 가시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의 GTX사업과 더불어 지방 철도망 확충을 위해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공항 배후 중심도시로의 구미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미시는 김장호 시장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노선에 구미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구미시에 초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는 총사업비 2조 444억 원에 66.8km의 복선전철로 계획되며, 정부의 발표대로 금년 2월 중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 12월에는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가 개통됨에 따라 대구와 접근성을 높여 금오산과 금리단길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구미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청년과에서 진행 중인 구미역 복합문화거점공간사업을 통한 구미역사 1, 2층 전면 개편 등 구미역 도심활성화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구미-김천)도 올해 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수도권 및 중부내륙지역과의 산업물류, 여객의 활성화를 위해 '김천~구미~신공항-의성'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 건의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가 신공항 배후 중심도시로의 구미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신공항을 중심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구미 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의성로컬푸드직매장, 설 선물세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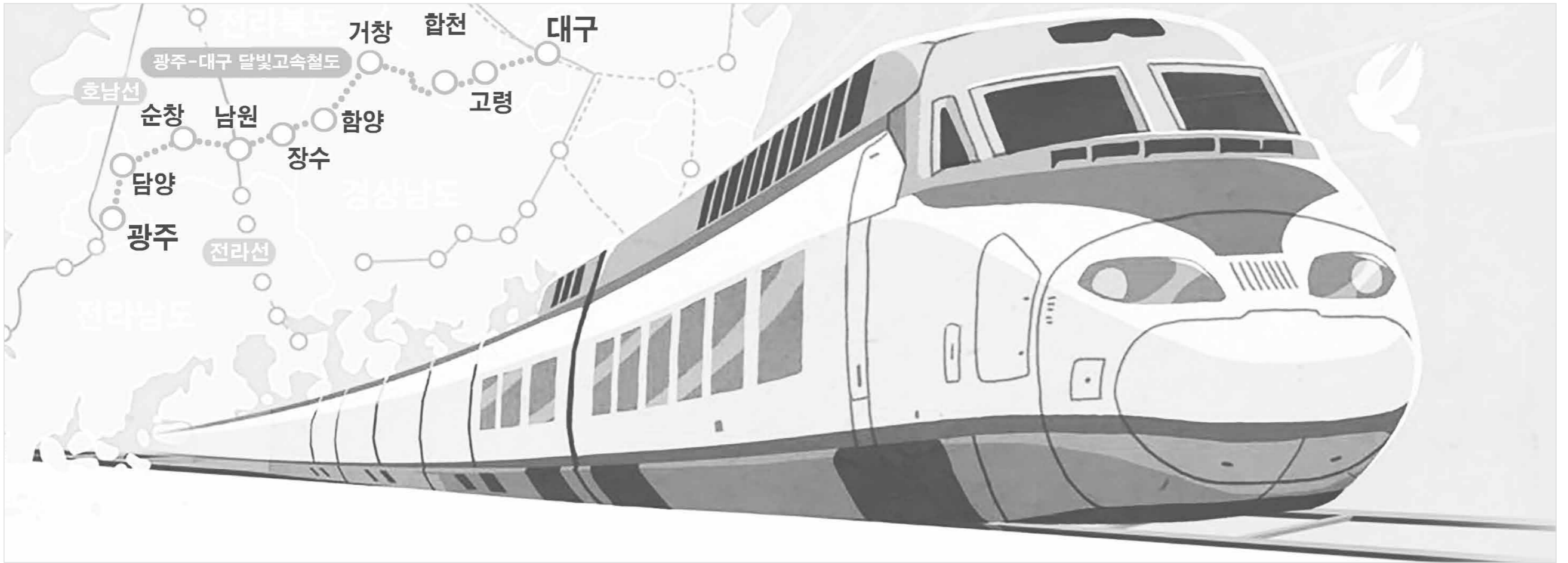
의성군은 의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의성에서 생산한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사과, 배, 한라봉 등 지역산 과일을 비롯한 꿀, 한과, 흑마늘, 고추장 등 74개 품목이다.

오는 2월 8일까지 직매장에서 전일 판매하고 직접 방문해서 선물세트를 주문할 수 있다.

또한 직매장 앞마당에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직매장을 찾아 구매하신 소비자께 선착순 100분에게 고감당요를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월 5일까지 택배에 약을 받고 있다. 직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054-833-1160)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

한편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명절 당일과 다음날은 휴무다. 박재성 기자



홍준표·강기정 정치 인생 최대 업적...달빛철도법 성사

1800만 영·호남 염원
대구·광주 철길 열어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는 198.8km...
2030년 완공 목표다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방광역급행철도인 'x-TX'를 추진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통한 지방 메가시티 조성, 그리고 인구소멸 지역의 개발 촉진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시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216명이 참여해 반대 1명, 기권 4명을 뺀 211명이 찬성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는 198.8km, 2030년 완공이 목표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7110억원(북선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이지만 여야는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목표 아래 경제성 평가를 건너뛰는 데 합의했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대구·광주 등 6개 시·도와 정치권이 총력을 펼쳤다.

이 결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난해 8월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의 서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담긴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데 성공했다.

영·호남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2030년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면서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청사, 세종청사, 충북도청,

청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 연결도 추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광역급행철도는 지방에도 GTX와 같은 철도를 놓겠다는 의미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아직 사례가 없어 정상 추진되면 아마 1호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만 해야 하는 이유가 없고, 부산 등 지자체에서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도 교통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메가시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 래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35%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지방 대학, 일자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도 꾀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에 분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교통망 등 조성을 통한 지방 인프라 구축은 국토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지방의 인구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 지자체(도)의 전체 인구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 2개보다 적은 곳도 여럿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서의 인구편중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이 점차 늘어날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진다면, 지금보다 적은 인구가 동일한 면적(지역)에 분산되더라도 광역경제권, 광역생활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교과서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영호남 1800만 염원 풀었다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월 25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 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줬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되기까지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했다.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다.

하지만 여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다.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폴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돼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2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시는 지난해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임박 쾌거를 이루게 됐다.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여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여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전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한다.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방향 철도가 주축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다.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한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 홍준표 축하메시지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달빛철도 건설을 법률로 견인하는 입법 쾌거입니다.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막혀 진전하지 못했던 달빛철도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비수도권 도시 간 동서 간선철도인 달빛철도는 급진적 환산이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영호남 동서장벽에 혈맥을 뚫는 철도입니다.

영호남은 달빛철도를 타고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발견하며 상생 발전하는 남부 경제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TK신공항과 연계될 달빛철도는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의 수송 기회를 제공하여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달빛철도의 가치와 의미에 뜻을 같이 하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 해주시고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공동발의라는 압도적인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특별법 통과까지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1800만 영호남 시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달빛철도가 가져올 변화와 혁신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구가 다시 한번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는 에너지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계획

이번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한다.

연내 여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한다.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된다.

■ 이철우 축하메시지



드디어 동서 화합의 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영호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시도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께 특별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경북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사명감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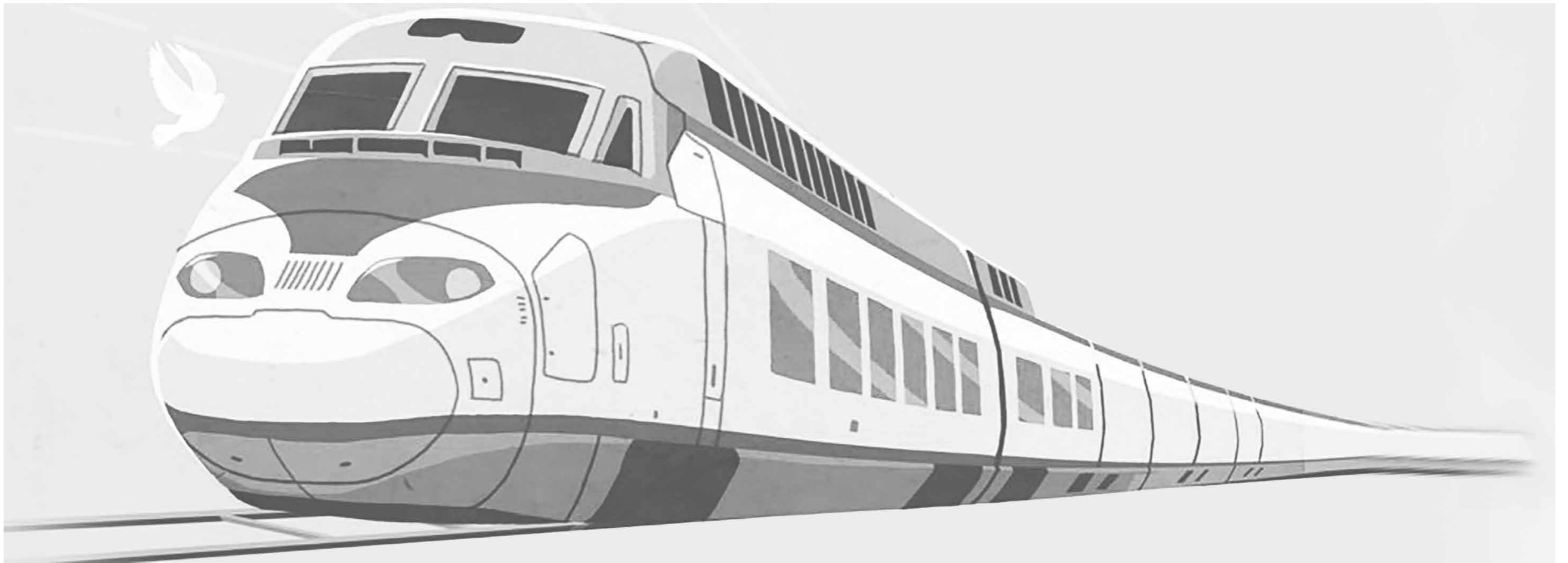
철도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화의 역군이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성장기 국가 경제 주도를 위해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탓에 동서축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였습니다.

이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철도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더욱 가까워지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내 유일의 달빛철도 경유지인 고령가야고분군에 국민과 세계인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큼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이 이루었고, 이제 함께 만들어 갈 길입니다. 앞으로 달빛철도가 조속히 개통되어 영호남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여은 기자



‘달구벌-빛고을’ 달빛철도 건설 7조 넘는 생산유발효과

2038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필수 인프라 구축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달구벌-빛고을)철도’가 건설되면 7조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2020년 10월 발표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에서 달빛철도는 7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명문화한 법안으로, 인프라 자체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남북 거대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향후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돼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달빛철도가 지나가는 경유지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는 수송체계가 구축돼 각 지역간 첨단 미래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지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방향 건설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허락을 풀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이끄는 SOC(사회간접자본)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영-호남뿐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다.

그 효과는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총연장 198.8km 동서를 횡단하는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법을 바탕으로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연내 예타 면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

단기간 집중투자로 설계와 시공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을 병행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준 영-호남 주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 “달빛철도 개통되면 대구 배후도시로 발전”

이남철 고령군수는 26일 “달빛철도는 대구광역시와 영남지역의 연계성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 인프라간 접근성이 개선되면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대구-고령을 거쳐, 경남, 전북, 전남을 통과해 광주로 연결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상생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열린 지방시대’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북 유일의 달빛철도 통과지역인 고령이 ‘고령역’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면 대도시인 대구권 배후도시가 돼 생활인구와 유동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철도가 개통되면 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만민한 달빛철도만 시비”…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나”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달빛(대구-광주)철도건설 특별법’을 놓고 일각에서 나온 여야정치권의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GTX 시대를 연다고 발표했다.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수도권 집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백조에 달하는 서울 중심의 새로운 철도망 구축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국토균형 발전과 동서 협력을 통한 10조도 안되는 달빛철도는 만만하니까 시비를 건다”고 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134조원을 투입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 것”이라며 GTX 노선 개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나?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뻔새논리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거다. 생각을 바꾸고 두 눈 크게 뜨면 더 큰 세상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트(insight)와 포어사이트(foresight)라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며 장기적 안목을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회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서화합의 상징적 사업이 30년 만에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공동환영문을 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크게 반겼다.

양 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지난해 4월 달빛동맹 1단계인 하늘길을 열었고 오늘 2단계인 철길

을 열었다. 영호남은 이제 하늘길과 철길로 연결된다”며 “달빛동맹의 다음 단계인 미래산업의 길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산업동맹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양대 시장은 “민선 8기 시작 4개월만인 2022년 11월 달빛동맹 강화 협약, 균형발전동맹을 맺고 하늘길, 철길, 물길을 열자고 다짐했다”며 “그로부터 5개월만인 지난해 4월 달빛동맹 1단계인 하늘길을 열었다. 대구와 광주는 공학특별법 동시 통과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달빛철도 예타면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하고 추진했다”며 “그리고 오늘, 달빛동맹 2단계인 철길을 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불과 9개월만에 대구와 광주는 힘을 합쳐 또 한번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구와 광주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며 “사실상 단절돼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민의 일상을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빛철도법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가질병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대구-광주 1시간대 만나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남북광역경제권 구축 등으로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상의 “초광역 경제공동체 신포탄”

대구상공회의소는 25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영호남 사·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쾌거로 남북국도발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구상의는 성명에서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뿐 아니라 철도가 지나가는 영-호남 10개 지자체와 1700만 지역민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켜 남북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신포탄”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상의는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경북신공항과 시너지 효과는 물론 신남부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계기가 된다.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주당 대구시당 “환영”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달구벌-빛고을)철도건설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달빛철도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뤄낸 하모니의 결과”라고 했다.

대구시당은 “달빛철도는 2021년 4차 국가철도망사업위원회에서 선정돼 2024년 1월 특별법으로 완성된 건국 이래 최초의 국토 중단 철도망 사업”이라며 “달빛철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261명과 두 도시 시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홍 시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달빛동맹 3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달빛동맹 3차사업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 3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일부 수도권의 논리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은 유감이지만 다행히 오해가 풀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법사위에서 (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여야 지도부의 도움이 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달빛동맹 3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시와의 협의의 의사를 밝혔다.

달빛철도 주요활동 경과 일지

- ▲국가계획
 - △1999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고시(대구-광주간 단선전철 사업)
 - △2006년 3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
 -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
 - △202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
 -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포럼, 토론회 개최 (5회)
 - △2017년 12월 18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 △2018년 9월 3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포럼
 - △2019년 9월 6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포럼
 - △2020년 7월 29일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 토론회
 -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 토론회

- ▲연구 용역 (3회)
 - △2012년 12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방안 검토 용역
 - △2018년 7월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연구(대구, 광주)
 - (기간)2018년 7월~2020년 10월 한국교통연구원 (B/C 0.510)
 - △2022년 2월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경남도)
 - (기간)2022년 6월~2023년 3월 경남연구원-경남지역 노선 중심

- ▲영호남지역 공동 행사 (7회)
 - △2017년 7월 20일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출범
 - 대구-광주 정치, 경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46명
 - △2018년 3월 9일 달빛내륙철도 경유 지자체장협의회(10개) 개최
 - △2021년 4월 대구-광주시장 공동건의문 청와대와 국토부 전달 및 영-호남 6개 시도단체장 공동호소문 발표
 - △2220년 11월 25일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서 체결(대구, 광주)
 - △2023년 4월 17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 협약서 체결(대구, 광주)
 - △2023년 11월 27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 국회 건의문(대구, 광주)
 - △2024년 1월 3일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14개 광역기초단체)

- ▲대통령 공약
 - △2017년 4월 19대 대통령 상생공약 및 국정운영 계획 반영
 - △2022년 4월 20대 대통령 대선공약(국정과제) 반영
- ▲특별법 제정 과정
 - △2023년 3월 대구정책연구원 수시 정책연구과제 추진(법안 마련)
 - △2023년 8월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윤재옥의원 등 261인)
 - △2023년 8월 23~9월 6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2023년 11월 15일 특별법안 상정(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2023년 12월 5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1차)
 - △2023년 12월 19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차)
 - △2023년 12월 21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3차)
 -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2024년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지구심사
 - △2024년 1월 25일 달빛철도법 국회 통과



경주시 외동읍 '꿈이 크는 책가방 지원 사업'

외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외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꿈이 크는 책가방 지원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책가방을 지원한다.

상급학교 입학에 응원하고,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외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사업은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외

동읍 복지사업수행을 위해 공동모금회와 경주시 연합모금사업 '함께 모아 행복금' 기부로 마련된 재원으로 사업을 한다.

강기순민간위원장은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게 돼 기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주시, '황금별 테마거리' 새단장... 7억5천만원 투입

경주의 별로 지정한 개양성 컨셉으로 한 '빛 광장' 조성

경주지역 최대 상가 밀집 지역인 '금리단길'이 빛을 주제로 한 테마거리로 새롭게 단장된다. 시는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금리단길 황금별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오는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점재하는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끝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나섰다. '금리단길 황금별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7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신라대종 정원에 북두칠성의 여섯 번째 별이자 경주시가 경주의 별로 지정한 개양성을 컨셉

으로 한 '빛 광장'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북두칠성 일곱 개의 별모양을 형상화한 바다조명을 설치해 '개양성의 여정'이라는 컨셉의 프로제션 조명을 함께 설치된다. 신라대종 정원 빛 광장부터 원효로까지 구간에는 황금별 여정을 테마로 한 '빛 거리'도 만든다. 빛 거리에는 게이트 3곳을 설치하고 구간 곳곳마다 LED고보, 레이저 조명 등이 설치, 조명 조형물도 들어선다. 이 거리가 조성되면 대공원 관광객들의 금리단길 유입으로 중심상권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황리단길과 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이 '금리단길 황금별 테마거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 명절 대비 코로나 19 백신접종 집중기간 운영

경주시는 새달 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백신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기간운영은 해외여행, 가족모임, 시설 면

회 등 이동량이 많고 집단 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고위험군의 감염 및 중증 위험에 대비한다. 코로나19 양성자(표본) 감시현황에 따르면 1월 2주차(1월7~13일) 신규 양성자는 5040명(일평균 720명)이다. 입원환자는 지속 발생 중으로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은 "전통시장서 장보고 점심 먹어요"

경주시, 1~11월까지 부서별 월1회이상 자율적 운영실시



시청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성동시장을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경주시가 시청 직원들의 전통시장·상점가 이용 생활화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시는 올 1~11월까지 부서별 전체 직원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밥먹고' 행사를 한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은 대면 거래가 중심인 전통시장의 고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인들을 돕고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월 1회 이상 부서별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이 20곳에서 점심 먹기

또는 장보기를 한다. 시는 서민경제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는 착한 가격업소도 행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12월 중 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는 30~7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전통시장에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화재안전시설 및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 △성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특성화시장 육성(황남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중앙시장 디지털전통시장) △행정처리 및 고객편의를 위한 시장별 매너지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 등을 추진한다.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E-커머스 지원사업,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에 가속도를 낸다. 주낙영 시장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 녹색성장 탄소중립 실천 앞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4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기총회에는 김성학 부시장, 협의회 위원 등 40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신입위원 위촉

장수여,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SDGs-ESG 실천 사례 발표, 2024년 사업계획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학 경주 부시장은 "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명실공히 환경단체의 리더인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꾸준한 협조와 동참으로 녹색 성장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년 10대 회장에는 윤태열 (취남경엔지니어링 대표, 부회장은 이현철 (취지구이엔씨 대표)를 비롯한 신규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윤태열 신임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은 "맑고 푸른 경주를 만드는 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앞장서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살기 좋은 경주 만들어요"

경주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 학습지 지원 사업 앞장

경주시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사업과 자녀 대상 방문학습지 비용지원 사업을 한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참여가 어려웠던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방문교육지도사 13명이 11 맞춤형 지원으로 △한 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한다. 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총 80회 실시 된다. 부모교육은 임신·출산·영양, 유아기, 아동기로 나누어 각각 40회씩 지원된다.

자녀생활서비스는 3세~12세 이하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코칭, 숙제지도, 정서지원, 문화역량강화, 생활습관 등 교육을 총 80회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정)는 무상이며, 150% 초과(나정)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사업은 다문화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해 학습지도가 어려운 다문화자녀 중 5세~9세 아동대상으로 1:1 가정방문 맞춤형 서비스(눈높이 한글, 수학)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월 3만 3000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34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사업이 이뤄졌고,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 사업은 월평균 184명에게 지원됐다. 지원을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경주용강1아파트

경주시가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관리공단 경주용강1아파트'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했다. 선도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관리공단 경주용강1아파트 모든 직원들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응호적 태도 확립, 치매예방 활동, 치매극복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은주 경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써주시 주택관리공단 경주용강1아파트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경주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기타 치매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치매안심센터(054-760-2950-2)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영세 자영업 큰 혼란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한숨만 중대재해법 확대 구미 50인 미만 사업체들 회사제대로 굴러가겠나 상시근로자 5명 넘는 소기업 확대 건설현장, 공사금액 상관없이 적용 중대재해법 대구·경북교육청 예방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으로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과 빵집까지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됐다.

노동당국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밀착지원한다. 하지만 여·아가 '네 탓' 공방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기 못하는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이날 여야는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유예안은 14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나"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에 정부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된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가져온 것이 없다"고 맞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 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법의 안전 지킴이 모호해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 중대재해법 대구·경북교육청 예방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교 등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교육청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실무협의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당국은 중대재해를 막고 안전보건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올해 27억원을 투입 △학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점검 및 컨설팅 실시 △안전보건준수 준수 의무 확립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안전교육 내실화와 안전문화 활동 강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구미 50인 미만 사업체들 "회사 제대로 굴러가겠나" 구미시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안전관련법 준수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걱정을 쏟아냈다.

26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지역에는 4605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만4862명이 근무하고 있다.

구미국가산단에는 2148개 제조업체의 90%인 1932개사가 50인 미만 업체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 결정되자 업체들은 "중대재해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나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하고 있다.

업체 A씨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벌금은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게 생겼다"며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들 때문에 경계가 망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자 B씨는 "벌금을 못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실



형을 살아야 하는데,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76%가 '중대재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제도 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며, 기업은 안전보건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 대구·경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 대구·경북본부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한다. 산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대금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68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그 수가 644명으로 39명(5.7%)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 여당과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

사례	경영 책임자 처벌 여부
직원이 회사서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경우	회사의 방역 조치 미흡했다면 처벌 가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자살한 경우	경영진의 관리가 소홀했다면 처벌 가능
근로자의 실수·안전 수칙 위반으로 사고 난 경우	경영 책임자가 방치·확인했다면 처벌 가능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면 처벌 가능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면 처벌 불가
대표가 크게 부상을 입은 경우	대표 본인이 치료를 받은 이후 처벌 가능
대표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처벌 불가
통근 버스에 사고가 났을 경우	버스 기사 잘못이면 경영 책임자 처벌 불가 회사의 관리·운영 문제 있었다면 경영 책임자 처벌 가능

두고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지만, 지난 25일 국회가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 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리"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리"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공장, 영세 기업, 동네 식당과 카페 등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바탕으로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 △"일터에서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 근로자의 사망, 부상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 구체적으로 '중대 재해'의 기준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중대산업재해'다."

- 작은 카페나 음식점에도 적용되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미용실 등 음식점 및 서비스업과 일반 사무직 회사에도 적용된다. 건설현장은 기존에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지만 27일부터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 기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나누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 △"아니다. 정상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 받지 않겠지만, 누가 봐도 하나의 사업장인데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해 점포 하나를 두 개로 나누고 직원도 각각 4명 이하로 배치하는 등의 '쪼개기'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 받나. △"아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

- 안전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목표를 정하고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이를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가령 빵집 시장은 반죽 기계나 오븐의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체 크리스트로 작성해도 된다."

- 카페, 식당도 안전관리 담당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 △"아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노 처리업 등 5개 업종만은 예외다. 이들 업종은 근로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새로 채용할 필요는 없고 기존 직원이나 경영자가 겸임해도 된다."

2600여만명 민족 대이동...영덕군 설맞이 행사 풍성



김광열 영덕군수, “설 명절 전통시장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보기 행사’ 마련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은 벌써 고향을 향해 가고 있다. 2600여만명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된다. 일선 지자체마다 쾌적하고 깨끗한 설 명절을 맞이하는 '설 맞이 대청결 운동'을 한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고하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향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대개의 고장 영덕군도 무척 분주하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열고 설 연휴 쓰레기 수거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마을마다 온정의 손길도 잇따른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따뜻한 기부 이어지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민들도 전통시장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처럼 참 낭만적이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영덕 고을이다.

■ 설 명절 장보기 쓰레기 수거

영덕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9일부터 새달 8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한다.

행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 등 소비자의 구매 형태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간 군청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등 1050여명이 참여한다.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덕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장보기를 한다.

설 연휴 동안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날 당일인 다음 달 10일을 제외한 기간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예년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수거,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

군은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설 연휴 동안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내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 13대와 가용



인력을 총동원 한다. 수거 작업이 중단되는 설날 당일에는 쓰레기 배출을 자제토록 홍보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각종 선물 포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은 성상별로 잘 분리해 배출시키고, 설 음식은 적당한 양으로 마련해 자원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선택폭을 넓히고 관내 업체들이 공급업체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관광·서비스 3개 분야에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영덕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배출할 수 있는 업체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판매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새달 2일 오후 6시까지이다. 영덕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730-6774)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영덕군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수산물 촉진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는 영덕읍 시장 29개 점포와 영해만세시장 11점포에서 이뤄진다.

새달 2~8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2만 원을 환급받는다.

해당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시장 내 환급 부스로 방문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 4500장을 마련했다.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영덕읍 전통시장, 영해만세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및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모두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관내 우수한 수산물 가공품을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 누리집(www.y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희 부군수는 “설 성수품과 수산물을 영덕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 부담도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귀향인 또는 관광객들이 희망차고 풍요

로운 설날을 맞이하도록 준비했다. 따뜻한 연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따뜻한 기부 이어져

영덕군이 '희망2024 나눔캠페인'의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했다.

여전히 지역사회가 여전히 성금 기부를 잇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영덕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일동이 각자 정성을 모아 100만 원의 성금을 영덕군에 기탁했다.

23일에는 (사)건설기계개발연명자사업자협의회와 영덕군 명예협회가 각각 200만 원, ㈜아름다운정소박사가 100만 원, 24일은 영덕건축사사무소와 성재건축사사무소가 각각 1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2024 사랑의 온기 나눔 이어가기’ 행사도 온누리에 울려 퍼진다. 범국민 계몽운동이다.

지난 24일 강구면 오포리에서 연탄나눔 자원봉사와 사랑의 떡국 나누기 활동을 병행하는 사랑의 온기나눔 이어가기 행사를 했다.

행사는 서로 돕고 위로받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행정안전부의 취지를 경북도가 실정에 맞게 기획했다.

지난 17일 예천군을 시작으로 도내 21개

시·군이 설 명절 전까지 이어가기 계몽운동을 한다.

이어가기 계몽운동은 김광열 영덕군수와 비릿,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과 위원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이영철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장, 박일동 영덕군새마을회 지회장, 이상임 대한적십자사 영덕군지구협의회장, 서용택 전국모범운전자회 영덕군지회장, 김명진 송아리가족봉사단장, 오동화 냉장고물부탁해봉사단장, 신현후 나래네티봉사단장, 선린대학교 GB대학 사회봉사단 등 10개 기관·단체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사랑의 온기나눔 이어가기 선포와 함께 연탄나눔 봉사활동으로 관내 4가구에 각각 연탄 200장이 전달됐다.

강구면 오포리 마을주민과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함께 펼쳐 서로 온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 이후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설 명절 전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40가구를 대상으로 방한 물품 나눔 활동을 펼칠 것을 기약, 계몽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권용걸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선포식에 참여해 주신 기관·단체·학교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온기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중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도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세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이병환 성주군수 새로운 성주, 더 큰 성주로 도약

새해 사자성어 '응변창신'
본예산 6000억 시대 개막
참외 조수입 6000억 달성
부자 농촌 명성 위상 펼쳐
튼튼한경제도시 건설매진



이병환 성주군수가 갑진년 여의주를 문 청룡과 함께 비상한다.

성주군의 2024 새해 사자성어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이다. '변화에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다.

그는 새로운 성주, 더 큰 성주의 도약을 꿈꾼다. 이 군수는 경제가 발전하는 희망성주, 활력이 넘치는 역동성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성주,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성주를 만든다.

올해는 민선8기 출범 3년째다. 그는 2024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이 군수가 내건 국정방향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완성 △성주읍 도심 대개조 △참외조수입 6000억원 시대 △문화·관광산업 도약 △군민 생활의 질이 한 단계 높아 △재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성주 구축 △공직 분위기 및 공직 마인드 혁신의 원년으로 정했다.

7개의 국정운영 방향을 포함한 분야별 역점시책과 중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새로운 성주, 더 큰 성주로 도약한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 새로운 도약의 원년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7기 이후 군민과 함께 이루어 낸 미래 성주의 밑그림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2024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병환 군수는 올해 성주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본격적인 국정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 성주군 최초 본예산 6000억원 개막, 참외 조수입 6000억원 달성, 건강문화캠퍼스를 비롯한 도시재생2단계 사업 추진, 2년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등 지난해 성과를 공유했다.

2월 준공되는 전국 최초 비상품회 농산물 자원센터 운영으로 양질의 퇴·액비 공급과 품질좋은 성주참외를 유통, 명실상부 부자농촌의 명성을 이어간다.

■ 더 큰 성주 도약

이 군수는 초선 당선부터 일관되게 공직자의 청렴과 군민 중심 행복성주의 국정목표를 세워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피력해 왔다.

그 결과 성주군은 국민권익위 주관 2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중앙부처·도청 등을 발로 뛰어 다녔다. 공모사업을 포함한 역대 최고의 국·도비를 확보, 본예산 6000억 시대를 개막하는 등 성주군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결과에서 성주군은 1인당 생산액(2021년 기준) 5980만원으로 군부1위, 도내2위를 달성,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병환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더 낫게 군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언론인들에게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 미래 신성장기반 구축

'동서3축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참외 조수입 6000억' 확고히 다지고, SOC교통망 완성과 부자농촌 명성을 이어간다.

성주군 최대 현안사업인 동서3축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가한국개발연구(KDI) 예비타당성 결과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이 군수는 인근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력,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

국도 30호선 선남-다사간 6차로와 국도 67호선 및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 지방도 903호선 신설과 지방도 923호선 개설 등 확정된 주요 도로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힘쓴다.



성주가 대구 경북 중서부권의 신(新)교통 중심지로 도약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완성의 원년으로 만든다.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행정복합센터), 별의별 문화마당 등 도시재생 2단계 사업 완료와

이전 친환경 사업 및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등으로 성주읍 도심 대개조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성주형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이 군수는 농촌협약사업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초진면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경북도와 함께 수립하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연계 종합발전 계획으로 지역발전의 신성장 거점을 개발한다.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통합 신공항 연계사업 발굴, 성주형 K-U시티 프로젝트 추진은 눈여겨 볼만하다.

성주의 미래의 심도 있는 구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농민이 행복할 풍요로운 부자농촌 건설에 매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대폭 확대, 청년 농업인 1000명을 육성,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한다.

농업에 ICT 과학기술을 융합한 성주형 스마트팜 시설 확대와 참외 수정벌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 안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 성주 가야산 시대 연다

지방도 903호선 가천~중산간 도로를 연계, 성주 가야산 시대 열여가는 서부권역 관광의 큰 밑그림을 완성한다.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1단계 사업과 월향 인촌지·조전 소성지 생태공원과 더불어 낙동강변 성주 파크골프장 조성을 마무리한다.

성주참외 & 생명문화축제는 군민 참여 확대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표축제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

농촌체험 축제인 황금들녘 메뚜기축제와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문화예술화관 소공연장 건립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늘린다.

세종대왕자태실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지속 추진으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등 문화·관광산업에 행정력을 아h는다.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성주를 만든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 산업단지 내 성주혁신지원센터를 준공한다.

맞춤형 기업지원에 강화, 일자리 JOB센터를 확대 이전한다.

공장설립 원스톱(One-stop) 행정추진,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수출기업 지원, 기업체의 이차보전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지역의 소상공인이 경기 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청년 창업가 육성과 청년 스타트업 지원으로 청년층의 관내 정착을 적극 꾀한다.

성주군은 2022년 기준 수출액이 8억 달러 이상을 달성, 도내 군부 1위(도내 7위)를 차지하는 등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 친환경 도시를 건설

지속적인 성주형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든다.

튼튼한 경제도시, 생동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

사계절 안전하고 살맛나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든다.

'친환경·저탄소'라는 지구촌 명제에 동참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폐제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한다.

함께 사업비를 확보한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폐차 및 재활용품수거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환경민원 대응기동반 상시 운영과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확대로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한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동락·관화·윤동·사창·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어은지·칠산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을 적극 시행한다.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초기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100세 시대 복지정책

이 군수는 온 세대가 행복할 살고 싶은 복지도시를 만든다는 정미빛 청사진을 그렸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통합보훈회관과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과 더불어 온세대 플랫폼과 케어팜 빌리지를 조성, 온 세대를 아우르는 체계적

인 복지서비스 제공이다.

상반기에 만다비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준공한다.

별고를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종합복지타운 내에는 볼링장을 건립한다.

100세 시대, 주민들이 삶의 여유를 즐기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도록 시설을 확충한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 인프라 확대와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도입 등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특색있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구감소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무주택 서민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검토, 인구유출 방지와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행복하고 살고 싶은 복지도시를 건설, 군민생활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원년을 만든다.

■ 열린군정 추진

이 군수는 군민과 소통·공감·화합하는 열린군정을 추진한다.

실제 성주군이 2년 연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그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대내외적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매진한다.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 제시된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소통·공감행정 열어간다.

중앙부처·경북도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세일즈 행정을 적극 실천한다.

성과는 적절한 보상으로 활기차고 열정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직원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직장문화의 정착,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 업무경계를 따지지 않는 부서협업을 정착시킨다.

행정편의가 아닌 군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직분위기 및 공직마인드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

도재훈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갑갑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매일 아침마다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경인: 구유문대
02-353-0009

신한국 문경시장, 인구소멸 의식하지 않는 도시 건설

마스함 넘치는 도시건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육
매출정보 출범 이래 파격
2023연간매출액 작년대비
문경약돌한우 124억 판매
문경약돌돼지 358억 매출
2023대한민국지역경제대상
'3관왕' 차지하는 영예안아



신한국 문경시장이 갑진년 새해 힘차게 비상한다. 문경시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평가한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시 종합부문 최우수상, 투자유치 부문 최우수상, 농업경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3관왕을 거머쥐었다.

평가는 17개 시도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 뿐 아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상표 출범 이래 매출액 최고치 경신했다. 부흥의 도시 경제 1번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생산자에게는 판로의 기회를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물 부담을 덜어주는 실속형 행사도 열고 있다.

신 시장은 찬란했던 탄광 전성시대의 풍요로웠던 추억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문경'을 일으켜 세우려 무던히 애쓰는다.

인구소멸을 의식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발판을 바짝조여매고 동분서주한다.

신 시장은 스마트 혁신 도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 △공공 상권이 부활하는 도시 △웃음꽃 피는 농업 도시 △힐링 관광문화 도시 △스포츠 체육 도시 △시민이 잘사는 도시 △살기좋은 행복 도시 △기초가 튼튼한 안전한 도시 △마스함이 넘치는 도시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3관왕'
문경시가 '2023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시 종합부문 최우수상, 투자유치 부문 최우수상, 농업경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3관왕을 거머쥐었다.

평가는 17개 시도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지방물가 등 9개 지표를 부문평가와 종합평가로 세분화했다.

통계·관세청 등에서 공시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산정 평가했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앞으로 국내·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핵심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과 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도시재창조와 또 다른 기적을 향한 힘찬 도약으로 문경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한 해 동안 투자유치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백종원 대표의 (주)더본코리아의 외식산업개발원, 글로벌 워터리조트 기업인 테르메그룹의 워터파크·호텔 등과 강릉 커피공장으로 유명한 테라토사 등의 국내외적으로 굽직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문경대 송실대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과 주출산 케이블가와 하늘길 조성사업은 국내·외 대기업 등 민간 투자유치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산업단지 등에는 28건의 MOU에 1441억 원의 투자유치와 407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공기관인 경북도소방장비기술원을 유치, 도민의 안전을 위한 국내 최고의 전문교육으로 토대를 마련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유치해 도민의 농업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생 유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과·오미자·약돌한우축제 등을 열어 7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약 3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 경제파급효과는 220억원에 달한다.

■문경약돌축산물 매출액 최고치 경신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육 매출행보가 출범 이래 파격적이다. 시는 2023년 연간매출액이 작년 대비 문경약돌한우는 22% 증가한 124억, 문경약돌돼지 6.8% 증가한 358억원이다.

팬데믹(전 세계적 인 유행병)이 시작된 2020년 대비 연간매출액이 56% 증가한 482억을 기록했다.

1999년 상표 출범 이래 역대 최고 매출액이다. 그 성장 배경에는 브랜드 농가와 관련 단체 그리고 문경시의 노력이 있었다. 약돌이란 국내 유일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가정식을 말한다.

인체에 유익한 성분(필수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기의 육질이 쫄깃하고 축산물 특유의 잡내를 잡아준다.

약돌가축은 타 가축에 비해 훨씬 더 강건, 항생제 등 약품 사용을 최소화해 약품 사용의 소비자 염려를 덜 수 있다.

시는 현재 약돌 브랜드의 뛰어난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약돌한우·돼지 상표권 사용유통업체 관련 조례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중하게 운영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약돌한우 1개소, 약돌돼지 3개소 선정)

문경약돌한우·돼지의 우수성 홍보 및 명품화를 위해 (사)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회를 출범하여 문경약돌 브랜드를 전국 일등 축산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2020년 12월 준공된 문경약돌축산물유통센터는 문경시의 랜드마크로, 단순한 기준 판매구조에서 온라인 밴드 및 스마트스토어(문경장터 약돌머느리)로 판매처를 다각화했다.

약돌축산물의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육가공품 제작·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선호 부위의 활용도를 높였다. 더본 외식산업개발원과 신제품개발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약돌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끝없이 정진 중이다.

지난해는 문경시에 선물같은 한 해가 아닐 수 없다.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최고 매출액 경신부터, 20억 규모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약돌축산물 육가공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할 기회가 주어졌다.

신한국문경시장은 "작은 물결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고 향후 전국 대표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 소비자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 명절 특별할인행사
문경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새달14일까지 특별행사를 한다. 진행한다.

장소는 '문경사랑새재장터'와 '문경새재의 아침' 등 온라인쇼핑몰 2곳과 문경새재직판장,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상·하행선 휴게소직판장 등 오프라인매장 3곳에 있다.

'문경사랑새재장터'는 문경 하면 떠오르는 오미자(전국 생산량 45%)와 사과(전국 생산량 6위)와 관련된 다양한 가공상품을 비롯해 약돌한우세트, 표고버섯 등 200종류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최대 22%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문경새재의아침'은 전 상품 30% 할인, 2만원 이상 구입하는 신규 회원에게는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문경특산품 최고의 온라인 매장으로 자리 잡은 이 쇼핑몰 2곳은 농가와 생산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증기관 안전성 검사를 실시, 건강한 먹거리를 내놓고 있다.

시가 보증하는 친환경 및 품질인증품이다.

온라인 쇼핑몰인 문경사랑새재장터에서는 200여 종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문경새재 직판장 및 고속도로(상·하행선) 직판장에서는 400여종의 다양한 문경 농특산물이 전시·판매된다.

문경은 관광도시여서 온라인 쇼핑몰 뿐 아니라 관광객과 귀향객 방문이 많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설 선물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직접 고를 수 있는 제품을 더 많이 갖추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서비스는 백화점, 가격은 전통시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매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매출 42억원을 달성했다.

설 선물용으로는 국내 최고 품질의 문경오미자로 만들어 새콤달콤하고 색깔까지 화려한 오미자청과 와인, 한과, 오미자김, 당도 높고 포장까지 예쁜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 사과즙'·약돌한우세트 등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문경사과와 증류주, 산양삼, 표고버섯, 송화고버섯, 백화버섯, 아카시아꿀, 생강청, 꽃감, 고행지덕장에서 말린 황태포 등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새재장터와 새재의 아침은 유통 단계가 없는 산지직송 서비스와 공모를 통해 결정된 세련된 포장과 빠른 배송도 장점이다. 5만원 이상 구입 시 택배비는 무료다.

김동수 기자

영주시

힐링이 필요한 순간 스마트하게 즐기는

영주여행

영주시

지금 바로 스마트폰 마켓 or 앱스토어에서 **영주여행** 을 검색해보세요!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 중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을 잊지 마세요!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 구 광 역 일 보 는 독 자 가 숨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보 www.dgy.co.kr 등록번호(열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웅 부 사 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정치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

민계식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2023년 마지막 날 미국 전기자동차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자신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X(옛 트위터)에 "낮과 밤의 차이"라는 평가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밤'이라는 제목의 위성 사진을 공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TV 뉴스로 방영됐고, 새해 초 일간지들에도 두루 게재됐으니 많은 사람이 봤을 것이다.

사진은 한밤중에도 불빛으로 휘황찬란한 대한민국과 깊은 어둠에 잠긴 북한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광경을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은 평양 근처만 희미한 빛이 보일 뿐 온통 캄캄절벽이다.

'혁신의 대명사로 통하는 머스크는 이 사진에 "미친 발상: 한 나라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반반으로 나누고 7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란 설명도 첨부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몇 년 전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 세계에 나돌고 있다.

머스크는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으나,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며 인권 말살의 세습 왕조적 독재·전제 국가다.

필자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동안 강연이나 칼럼 등을 통해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자유란 무엇이며, 자유가 왜 중요한 지부터 생각해 보자. 흔히 자유라고 하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즉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로 다시 말해 법적인 자유를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의미의 자유가 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을 보장받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올바른 선택과 실천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스스로 행복한 생활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받기 원하며, 이러한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바로 이것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올바른 선택과 실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인간에게 창의를 불러오고 인간의 삶에 역동적이고도 풍요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인간 생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유가 왜 필요한가?"라고 물을 때마다 필자는 항상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대답한다. 머스크의 사진이 이를 웅변

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고 재차 물으면 자아실현에 대한 설명으로 답을 대신한다.

세상의 모든 제도는 완벽한 것이 없다.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으며 오히려 결함이 많은 제도다.

특히 민주주의는 극단주의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을 때, 또는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근본 기동인 선거에 부정이 개입될 때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이 현명해 야 유지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역사상 인류가 경험해 본 모든 정치 제도 중에서 최선의 정치 관행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발전 방향도 자유·개방·민주주의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이 주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이다.

독재·전제 국가에서 정권을 바꾸려면 피 흘리는 혁명적 투쟁이 전제돼야 하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두드러진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인권을 옹호받고 각자가 타고난 자질에 따라 창의력을 발휘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해 가면서 자신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 나 자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다.

오늘의 정치 논평

3만 소상공인의 '절규'가 민주당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김은수 국민의힘대구북대변인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과 서민의 생계마저 불로로 잡았습니다.

동네 식당과 빵집, 카페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의 적용이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은 전례 없는 혼란과 피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라는 거냐"는 영세 사업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는 데 대한 절박한 절규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과중한 법적 의무를 충족시킬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한 사업장의 무려 94%가 "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준비 부족과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호소에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사전인수식'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위성을 달에 보낼 돈이 없었습니까, 의지가 없었습니까?



최민석 더민주당대변인

차세대 우주 강국의 꿈을 망치려는 윤석열 정부에 의지가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렇게 무관심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미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큐브위성을 달에 실어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 문제로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수를 60조 원이나 펌프 내고 그 여파로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 등 우주개발 R&D 예산을 줄여서 삭감하더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운 아르테미스 계획마저 외면한 것입니다.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제시하며 달 탐사를 우주 강국 6대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까? 100억 원이면 인공위성을 달에 보내 달 탐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100억 원이 없다며 날려버리다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나갔다 하면 사고만 터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쏟은 578억 원은 있는데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미래를 위해 쓸 100억 원은 없다는 말입니까?

전문가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우주 분야 최상위 그룹에 걸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통탄하며, 우주 협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행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의제언

겨울철 한파 대비, 따뜻한 겨울을 위한 행동요령



김도연 예천소방서예방안전과장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비와 행동이 필요하다.

추운 날씨에 노출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한파경보 발효 시 도민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행동요령을 당부한다.

첫 번째, 겨울철 어르신 방문길 낙상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운 날씨에 방문길이 예상되는 날은 외출 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한다.

얇은 옷을 여러벌 착용하고, 굽이 낮은 신발을 착용해야 하며 미끄러운 곳을 걸을 때는 평소보다 보폭을 좁게 줄여서 걷고, 무게중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팡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 난방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난로나 히터를 사용할 때 화재 예방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보조적인 난방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환기에 유의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난방기구 전원을 끄고 플러그까지 뽑는 것을 습관화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외출 전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

급격한 온도 하락으로 인하여 도로 결빙에 주의해야 하며,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 차량용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등 자동차를 점검하여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한파는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방과 대비가 필수적이다.

모든 도민들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 위의 행동 요령을 실천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남지 않은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영천시 공고 제2024 - 1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4호선 경산 하양~금호 단구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영천시청

1. 공사개요

- 사업명 : 국도4호선 경산 하양~금호 단구간 확장공사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일원
○ 사업량 : L=3.1km, B=27.0m
○ 사업기간 : 2024. ~ 2028년 12월 31일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Table with 10 columns: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Rows include '기정 대로', '변경 대로', and '신설 소로'.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경상북도 경산시 동서리~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도로 확장 및 출입시설 개선을 통해 경산~영천간 이동 편의성 증대와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

4.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 공람기간 : 2024년 1월 19일 ~ 2024년 2월 3일(15일간)
○ 열람장소 : 영천시 건설과(☎ 054-330-6336)
○ 관계서류 : 위치도, 평면도, 용지도, 용지조서

5.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 열람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열람장소 비치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